

차별 더이상 없게...광주시, 행정 부문 인권침해 42건 개선

소비쿠폰 색상 논란 계기 실태조사...공공시설 접근권 침해 18건 최다
노동자 폭염 대책 미흡·저소득층 용어 명시·요금 체납 우편함 부착 등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 부문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추려내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인권침해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요청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광주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필요한 자격요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 행정용어에 따른 인권 침해, 기후위기·디지털 등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등 5개 유형의 42건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로 18건에 달했다.

시 산하 박물관, 공연장, 도시공원 등 일부 공공 시설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도서관 일부 열람공간을 어린이 열람실로만 제한한 점 등이 드러났다.

기후위기, 디지털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서도 6건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미흡과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환경권 침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5건이 확인된 불필요한 자격요건 침해 유형은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한 사례, 재난 대응훈련시 외국인 고려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됐다.

행정용어에 따른 침해는 4건으로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는 2건이 적발됐고, 수도 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문화예술 사업에서 일부 계층 소외되는 점 등 7건의 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광주에서 점검한 사례를 전국적으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공직 생애주기를 반영한 참여형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통 약자도 안전운전’ 기술 개발 나선다

광주시 ‘스마트카’ 공모 선정 국비 70억 확보...AI 기반 상용화 목표

광주시가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 기술을 개발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스마트카)'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통안전 기술과 편의 기술을 개발해 실증·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고령자 등 교통약자 운전자들의 인지적 한계와 상황 대응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행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 중인 소형 전 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활용하는 게 특색이다.

총 101억9000만원(국비 70억원, 민자 31억 9000만원)이 투입돼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통약자 주행패턴 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지센서 융합과 모듈 개발, 맞춤형 음

성·사용자 경험(UX) 적용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운전자 도움(어시스턴스)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평가 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이다.

광주시는 GGM의 캐스퍼 차량을 활용한 상용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동차 제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판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의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자·제어·통신) 인증평가 및 실증사업과 연계될 경우, 광주시가 미래차 선도시로 발돋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광주시는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진국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 국가산단을 아우른 220만평을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아 2028년까지 총 65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및 아세안 지역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더 화려해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전남도, 추진상황보고회...미식파티·페스티벌 등 프로그램 다채

오는 10월 1일부터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파티, 페스티벌, 비즈니스 등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상황보고회

를 열고 전서관 연출계획, 길러 콘텐츠, 핵심 프로그램 등 박람회 주요 현안을 집중점검했다.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박람회 '주제관'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남도 미식 시작부터 미래까지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지고 '미식 문화관'은 남도 미식 명인을 중심으로 시·군, 해외의 대표 요리

를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K-Food 산업관'에는 100여 개 식품기업이 입점해 선보인다.

홍보대사인 오세득·정지선·홍신애·임희원 셰프가 박람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한편, 재외동포청과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어·지역기업 수출상담회, 한식 비즈니스 포럼 등 산업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남도미식의 브랜드가치를 다지고 미식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력 소비 1.5배 늘어도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

한치환 책임연구원, 국회 토론회 기조 발제...전남, 발전 설비 증설 기대

오는 2038년 국내 전력소비량이 올해에 비해 1.5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늘어난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현재 가장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는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큰 전남에 발전 설비 등을 증설할 경우 전력수요 충당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한 기조 발제에서 기

존 전력수요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데이터 센터의 확충으로 2038년 전력소비량은 735.1TWh(테라와트시)로 예측했다. 그는 전력 수요량이 급증하고 화석연료 발전이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시장 잠재량은 600TWh로 원전 증설 없이 기존 원전(189TWh)만 활용해도 오는 2038년 예상 전력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태양광 잠재량은 495TWh, 풍력 발전(육상+해상) 잠재량은 171TWh로 분석했다. 두 발전원을 합한 총 잠재량은 666TWh로 2038년 예상 전력 소비량 735TWh의 90% 수준이다.

전남은 원자력 발전소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를 늘릴 경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큰 만큼, 빠르게 발전 설비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전남에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고, 정부 주도의 RE100 산단 유치에도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연구원의 예측대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이 추진된다면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등 전남도의 역점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책임연구원은 "시장적용이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도 석탄화력발전 대체가 가능하다"며 "기존 재생에너지인 수력, 양수발전, 시화호조력 등 결론적으로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원전 증설 없이도 가능해하며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땀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